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전현직 국회의원 · 검찰 관료 등 공직자 출신
후보자들의 전력과 자질에 관한 정보

요약	3
정치권력 위한 검찰권 남용·비위 행위 검찰 출신 후보자들	4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뇌물수수·알선수재 등 전력 있는 후보자들	11
폭력·색깔론 등 부적절한 행위로 국회에 징계안 제출된 후보자들	15
권한남용·인권탄압·정책실패 책임 있는 공직자 출신 후보자들	18
막말·의혹 연루 등 기억해야 할 전직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	24
색깔론·위증·종교차별·성희롱 등으로 기억해야 할 후보자들	27
부적절한 언행·의혹으로 주목받는 비례대표 후보자들	29
<표 1> 최교일 후보자(새누리당, 경북 영주·문경·예천) 담당 사건들 개요(12건)	4
<표 2>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자 (총 9명)	11
<표 3>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자 (총 32명)	13
<표 4> 뇌물 수수, 알선수재, 관세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자 (총 15명)	14

-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후보자들의 전력을 조사하고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을 조사, 정리하여 발표함.
- 조사 대상은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전현직 국회의원, 고위 관료, 검찰 등 공직자, 비례대표 후보자들임. 구체적으로 ▲정치권력을 위해 검찰권 남용한 검찰 출신 후보자들의 담당 사건과 처리 결과 그리고 징계 받은 비위 행위 ▲후보자들의 전과기록 중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전력 있는 후보자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제출된 후보자들 중 주목할 만한 폭력·색깔론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후보자들 ▲권한남용·인권탄압·정책실패 책임 있는 공직자 출신 후보자들 ▲막말·의혹 연루 등 기억해야 할 전직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 ▲색깔론·위증·종교차별·성희롱 등으로 기억해야 할 후보자들 ▲부적절한 언행·의혹으로 주목받는 비례대표 후보자들 등을 다루고 있음.
- 자료 조사는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선관위 등록된 전과기록, 국회 각 상임위 등에 회부된 의안과 회의록, 언론기사, 관련 단체 발표 자료 등을 참고하였음.
- 이 보고서는 20대 총선 전에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고,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 했나 이슈리포트>(2016년 3월 13일 발표),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2016년 3월 16일 발표),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2016년 3월 22일 발표)에 이은 네 번째 보고서임.

정치권력 위한 검찰권 남용 · 비위 행위 검찰 출신 후보자들

1. 최고일 (새누리당, 경북 영주 · 문경 · 예천)

● 검찰권 남용 수사 다수, 정치검찰의 전형을 보여준 후보자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사회 거센 논란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건들을 수사, 지휘함. 그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음.

〈표 1〉 최고일 후보자(새누리당, 경북 영주 · 문경 · 예천) 담당 사건 개요 (12건)

사건명	검찰 처분 연도/ 사건 당시직위	사건개요/약평
정연주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2008 서울중앙지검1차장	KBS 정연주 사장이 2005년에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 재판부의 중재 권고로 국세청과 합의해 556억 원만을 환급받고 항소심을 취하. 이명박정부 출범 후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여 KBS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이 정사장을 수사한 사건. 정상적인 법률검토 후 법원의 조정 권고안 수용한 것임에도 회사 이익을 독단적으로 포기했다며 배임혐의를 무리하게 적용. 기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검찰권을 남용한 수사였음. 실제 검찰의 기소 내용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한 차례도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KBS를 장악하기 위해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검찰을 동원해 형사처벌까지 시도한 것으로 평가됨.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수사	2012 서울중앙지검장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를 짓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장남인 이시형 씨의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였고,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일괄 구입하면서 이시형 씨가 부담할 몫을 의도적으로 줄임. 이런 부지매입 과정이 대통령 일가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준 반면 국가 예산은 유용한 것이라는 점과 이시형 씨가 부지매입에 쓴 자금의 출처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특검이 재수사한 사건. 검찰은 2011년 10월 고발이 접수된 이후 8개월간 수사하면서 의혹의 핵심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는 서면조사만 한차례 진행하고, 피고발인 7명 가운데 김인중 전 경호처장 단 한 명만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음.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함. 특검법 통과 이후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2년 10월 8일 최고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만약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 배임혐의를 적용한다면, 대통령까지 법적인 논란이 되는 만큼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 배

		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기자들에게 발언함. 특별검사 수사 중에는 애초 검찰수사 때 이시형씨가 제출한 서면진술서가 허위였다는 것이 드러남. 특검수사 및 재판 결과, 세 사람이 배임 또는 공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됨. 검찰이 대통령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권 행사를 포기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됨.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2012 재수사(2012.3)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명박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이 2008년 하반기에 신설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집권세력에 비판적이거나 또는 경쟁관계에 있던 민간인들과 정치인 등을 사찰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불법사찰과 압력을 당한 김종익 씨가 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폭로함으로써 사건의 일부가 드러남. 2010년에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그 수사결과가 부실하여 비난을 받음.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비롯해 불법사찰을 주도한 이들을 중심으로 증거자료를 파기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했다는 것이 추가 폭로됨에 따라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2012년 재수사에 착수하여 불법사찰 관련자들을 일부 추가 수사 및 기소한 사건. 불법사찰에 관여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양심선언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 근무자 뒷선의 개입이 일부 확인되었고 증거인멸 등의 진실은폐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이 1차 수사한 지 2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으나 집권세력 눈치 보기에 급급해 수사를 마무리함. 민간인 사찰 자체에 청와대의 지시나 사전 인지 또는 묵인 방조가 있었는지, 수사에 대비하여 진실을 은폐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자금이 지원된 의혹 등을 규명하지 못했음. 검찰의 수사가 엄정하지 못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미흡한 부실수사였음. 그 외에도 국무총리실의 조사가 끝난 후에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 착수 후에도 압수수색까지 며칠을 더 보내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검찰의 수사의지가 애초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	2012 서울중앙지검장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고승덕 의원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폭로하여 검찰이 수사하던 중, 일부 언론이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도 돈 봉투 살포 의혹이 있었다고 보도한 데 이어 보수시민단체가 고발하자 검찰이 적극 수사에 나선 사건.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압수수색과 통화기록조회, 소환조사까지 진행하는 등 의혹이 사실인 듯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짐. 의도적으로 '호들갑'을 떨었던 것으로 평가됨.
김경준 기획입국설 가짜편지 사건 수사	2012 서울중앙지검장	2007년 11월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 씨가 입국하자, 12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김경준 씨의 미국 구치소 수감 동료 신경화 씨가 작성했다는 편지를 공개하며, 김경준 씨의 입국에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함. 편지는 "자네(김경준 씨를 지칭)가 큰집(청와대를 지칭)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

		이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됨. 하지만 2011년 3월, 사건 관련자의 폭로로 홍준표 의원이 기획 입국설 유포의 근거로 삼았던 편지가 가짜라는 사실이 공개되고, 김경준 씨 등이 가짜 편지 작성자와 홍준표 의원 등을 고소하고 검찰이 이를 수사한 사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집권세력과 여당이 야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 측에 불리한 김경준 씨를 기획 입국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 주장이 가짜 편지를 이용한 것임이 확인되었음. 하지만 검찰은 가짜편지를 이용한 기획입국설 유포의 배후는 없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지음. 과연 검찰이 밝힌 대로 한 개인의 행위일 뿐 배후세력이 없는 것인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사건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대화내용 보도 한겨레 기자 수사	2013 서울중앙지검장	2012년 10월 8일,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나눈 정수장학회 보유MBC 지분 등의 매각 협의 대화내용을 보도함. 최 이사장이 실수로 휴대전화를 끄지 않은 채 이 본부장 등과 대화함에 따라 최 기자가 이들 간의 대화를 들은 것이었음. 최기자의 보도 후,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본 MBC가 불법도청 혐의로 최기자를 고발하고,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 불법적인 의도로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들은 것이 아니었고, 공익적 사안에 해당하는 것을 보도한 것이어서 검찰의 기소가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던 사건임. 언론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기소였음. (현재 3심 진행 중)
대형 유통업체 재벌 2세 국회 불출석 고발 수사	2013 서울중앙지검장	2012년 10월~11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 증인으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및 이마트 대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을 채택, 3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해외 출장 등의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 검찰이 약식기소 처리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는 점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	2014 서울중앙지검장	2004년 4월 탈북한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200여 명의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국정원에 의해 체포,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여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의 회유와 강압조사로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밝혀져 무죄 판결을 받음. 이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유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 3건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수사한 사

		건. 최고일 변호사는 검찰이 유우성씨를 간첩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음. * 이후 문서 조작관련 검찰 수사 당시 지검장이 교체됨. 수사에서 검찰은 국정원 이재운 대공수사처장(3급, 팀장)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마무리함. 국정원의 담당 국장과 원장 등의 관여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국정원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제기한 검찰 공안부 검사는 어느 누구도 기소하지 않아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쳤음.
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백원우의원 장 례식 방해 혐 의 수사	2009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법무부 감찰국 국장	2009년 5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헌화와 분향을 하려 제단으로 나가자, 장례위원이던 백원우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사죄하시오. 정치보복 사죄하시오. 여기가 어디라고…”라고 소리치다가 경호원들에게 즉각 제지당하는 사건 발생. 이후 보수단체가 백원우 의원을 고발하자 검찰이 장례식 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건. 백원우 의원은 “당시 나는 장례위원으로 상주나 유족과 다름없었는데 어떻게 장례를 방해할 수 있냐”고 주장, 유족이나 장례위원회가 백 의원의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고, 영결식이 무산되거나 중단된 상황도 아니었음. 보수단체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백의원을 기소, 무죄 판결로 확정됨. 검찰의 백 의원 기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괘씸죄로 처벌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최고일 변호사는 백원우 의원 고발당한 시기(2009.6)에는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백원우 의원 약식기소될 당시(2009.12)에는 법무부 감찰국 국장이었음.
광우병위험 쇠 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경찰에 대한 수사	2010 서울 중앙지검 1차장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를 강제해산하거나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규정을 벗어난 장비사용, 불법구금 등이 다수 발생함. 피해 시민들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을 비롯해 그 지휘관들을 고소해 검찰이 수사한 사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연행과 검찰의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는데 반해, 고소된 경찰에 대한 수사는 장기간 방치됨.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지가 없었고, 아주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청수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은 무혐의 또는 각하처분됨. 검찰의 공명정대함과 법질서 준수가 허구라는 비판을 받음.
GPS 간첩사건 수사	2012 서울중앙지검장	경찰이 무역회사 대표 이 모 씨와 뉴질랜드 교포 김 모 씨가 군사기밀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해 이를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가 있고,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4조 간첩 목적 수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2012년 5월 30일 대대적으로 발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해 피의자들을 간첩예비음모죄로 기소한 사건. 검찰이 경찰의 과장된 수사결과를 일부 조정하면서 기소했으나, 검찰의 공소사실 또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검찰이 간첩예비음모죄로 기소한 이유는 북한 공작원으로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었음.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도 북한 공작원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결국 법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애초 무리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을 받음.
회사자금을 개인적 투자에 이용한 최태원 SK그룹회장 수사	2012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라는 창업투자회사를 이용하여 SK계열사 자금 600억 원을 개인의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검찰이 재벌 총수 회장의 비리에 대해 외부의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한 사례이지만, 주범으로 본 최태원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구속 기소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음.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최회장에게 징역4년, 최재원 부회장에 징역5년을 구형. 구형량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더 높은 구형량을 제시하려고 했던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4년을 지시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 재벌 총수와 관련해 검찰이 엄정한 법적용을 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은 사건. 2013.1심 최태원 회장 징역4년 선고,법정구속/ 최재원 부회장 무죄선고/2심 최태원 회장 징역4년, 최재원 부회장 ,징역3년 6월, 법정구속됨/2014.3심 선고,상고기각 *2015.8.14. 최태원 회장 광복 70주년 맞아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됨.

● **선임계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 받음**

- 2015. 9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흥훈)가 최고일 전 지검장이 사건 7건을 수임하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한 사실을 적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함. 7건의 사건 중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선임 사실이 누락되어 있었음. 그러나 최고일 전 지검장이 선임계를 냈다고 주장하고, 동부지검도 선임계가 제출되었다고 주장.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이를 제외한 6건에 대해 2016년 1월 25일 최고일 변호사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내리기로 의결함.

● **보름 남짓 김무성 사위 변론 수임료 5천만원. 전관예우로 막대한 수임료 챙겨**

- 법조윤리협의회가 최고일 변호사의 ‘몰래 변론’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사건 관련,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사건 등 총 7건의 수임료 총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짐. 이 중 15차례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 변호를 맡아 수임료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최 변호사는 이 씨가 구속되기 직전인 11월 19일 변호인에 선임돼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12월 5일까지 보름 남짓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짐. 또한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 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간부의 상사로 함께 근무했고, 1심 재판이 진행될 당시 서울동부지법 법원장과는 고교 동문임. 전관예우로 막대한 수입료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박기준 (무소속, 울산 남구갑)

●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면직, 면직 정당하다 대법 판결

- 스폰서 검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어 법무부 면직처분, 행정소송 진행했으나 대법원에서 면직 확정됨.
-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 이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검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과 성매매 포함 향응 접대를 받은 의혹을 제기함. 2010년 6월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 열어 연루된 검사 10명 중 박기준 부산지검장 면직을 의결함.
- 검사징계위원회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2009년 8월-2010년 2월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보고 누락, 지휘·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함. 2010년 7월 대통령이 면직처분. 박기준 지검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원고 면직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고 최종 대법원 확정
- 판결됨.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법원에서도 면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등 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무리한 수사

-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전면파업을 하는 등 2009년 모두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기소한 사건.
-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업장 점거나 대체인력 투입 방해 행위도 없었고, 파업의 목적·절차·수단이 모두 노동조합법에 따른 합법 투쟁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검찰의 대응은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자 했음. 실제로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필수유지 인원을 남겨두고 찬·반 투표 절차도 지켜 그 자체로는 명확한 불법 파업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정부의 공기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춰 파업을 시작하는 등 목적 자체에 불법성이 있을 수 있어 신속한 조사를 토

대로 결론 낼 계획”(2009.11.29.)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당시 변호사와 노무사, 법학자 등 289명은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지지하며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2009.12.21.)하였고, 야당 소속 국회의원 94명도 한국철도공사의 철도노조 파업유도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요구서 국회에 제출(2010. 2. 3.)하기도 하였음.
- 하지만 박기준 후보가 부산지검장이었던 당시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본부장 조합원 23명을 불구속 기소함. 검찰은 고창식 본부장 징역 2년 6개월, 기타 2인 징역 1년, 8인 징역 8개월, 3인 벌금 500만원, 8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 결과 조합원들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벌금도 1/3~1/4 수준으로 감액됨.
- 정부 스스로 철도공사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저항하는 노동조합 등을 억누르고자 사측의 고소를 빌미 삼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 평가할 수 있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뇌물수수·알선수재 등 전력 있는 후보자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후보자들의 전과기록 중에는 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했거나, 뇌물수수, 사기, 알선수재 등 공직자 자질에 부합하지 않는 범죄 전력이 다수 확인됨.
- <표 2>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자 (총 9명)

김창수	국민의당, 대전 대덕구	정치자금법 - 200만원 (2005-12-28)
김태원	새누리당, 경기 고양시을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2000만원 (2003-08-18)
손창민	무소속, 대구 서구	정치자금법 - 100만원 (2011-02-16)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정치자금법 - 1,000만원 (2003-01-14)
송인배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갑	정치자금법 - 1,000만원 (2004-05-31)
안홍렬	새누리당, 서울 강북구을	정치자금법 - 100만원 (2005-06-21)
유영	새누리당, 서울 강서구병	정치자금법 - 500만원 (2004-06-12)
서청원	새누리당, 경기 화성시갑	정치자금법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2004-08-13)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 징역1년 6월 (2008-11-12) *2008년 사건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정치헌금 사건
정우택	새누리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치자금법 - 1,000만원 (2004-05-31)

- <표 3>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자 (총 32명)

강주열	무소속, 경남 진주시을	공직선거법 - 100만원 (2010-10-15)
권용준	새누리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공직선거법 -150만원 (2006-12-27)
김선기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50만원 (2003-05-09)
김용호	새누리당, 전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300만원(2000-08-10)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본인 선거 아님
김종길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진해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200만원 (2003-07-23)
김철	국민의당, 서울 마포구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1000만원 (2004-05-06) *본인 선거 아님
김철근	국민의당, 서울 구로구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50만원 (2005-05-1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3년 (1997-02-18) *본인 선거 아님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공직선거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8-12-17)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으로 이명박 후보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중희	새누리당, 경기 수원시갑	공직선거법 - 300만원 (2009-02-13)
박창달	무소속, 대구 중구남구	공직선거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5-01-26)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경남 거제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2000-07-28) *본인 선거 아님
서청원	새누리당, 경기 화성시갑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8.11.12.) *친박연대 비례대표 정치헌금 사건
설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4.11.30.) *2002대선 이회창 후보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손창민	무소속, 대구 서구	공직선거법 -500만원 (2011-02-16)
윤두환	새누리당, 울산 북구	공직선거법 - 150만원 (2008-10-07)
이만기	새누리당, 경남 김해시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200만원 (2004-12-29)
이철수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	공직선거법 - 200만원 (2010-12-15)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100만원(2000-07-07) *2000년 홍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 참여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 서구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995-10-27)
이홍철	무소속, 경기 시흥시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 400만원 (2002-08-30)
장영하	국민의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공직선거법 - 300만원 (2006-11-16)
정진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998-06-19) *본인 선거 아님
진재범	무소속, 서울 영등포구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500만원 (2005-06-21)
최민기	새누리당, 충남 천안시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300만원 (2005-01-28)
최연길	국민의당, 경남 창원시진해구	공직선거법 - 200만원 (2008-12-03) *본인 선거 아님
최지웅	무소속, 부산 사하구을	공직선거법 - 200만원 (2008-07-01) * 본인 선거 아님
허명환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을	공직선거법 - 150만원 (2009-03-12)
허영	국민의당, 인천 서구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4-07-09)
홍문종	새누리당, 경기 의정부시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 250만원 (2006-10-18)
홍장표	새누리당,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공직선거법 - 500만원 (2008-12-30)
황세연	무소속, 전북 익산시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1995-09-28)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100만원 (2004-08-24) *본인 선거 아님

● <표 4> 뇌물 수수, 알선수재, 사기, 관세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 (총 15명)

김동식	새누리당, 경기 김포시갑	뇌물 수수 - 자격정지 1년 (2007-07-26)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알선수재 - 1,000만원 (1999-07-16)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1994.0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1996.08.26)
김척수	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	관세법 - 300만원 (1999-04-16)
김한표	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2002-02-26)
명옥재	새누리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사기 - 200만원 (2014.02.12.)
박지원	국민의당, 전남 목포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 징역 3년 (2006-05-25)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사기 - 500만원 (2003-07-02)
우호태	새누리당, 경기 화성시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징역 5년 (2004-10-15)
유정기	국민의당, 부산 남구을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300만원 (2009-11-17)
이영수	무소속, 광주 북구을	사기 - 150만원 (2003-05-14)
이흥철	무소속, 경기 시흥시갑	사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7-07-12) 사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2-05-03)
임정엽	국민의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특정범죄가중처벌(알선수재)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2002-12-05)
임종천	민주당,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사문서위조·행사, 사인부정사용사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1997-08-11)
전하진	새누리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사기 - 300만원 (2005-12-07)

폭력·색깔론 등 부적절한 행위로 국회에 징계안 제출된 후보자들

- 18대, 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모두 97건의 의원 징계안이 제출되었음.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폭력행사나 색깔론 제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올라온 후보자는 아래와 같음. (강용석 전 의원 징계안이 가결된 것 이외에 철회, 소위 계류, 임기만료 폐기 등으로 처리되어 제대로 징계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음)

1. 하태경(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

- 원색적인 막말과 인신공격
 - 2014년 12월 16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사망 3주기 즈음 정부의 허가를 받고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한 박지원 의원을 “북한정권의 남자 대변인”, “북한에 굉장히 편향적인 북한정권 대변인”,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북을 자처하는 사람”, “김정은 정권의 십상시”, “김정은의 내시” 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12월 17일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제출됨.

2. 홍문종(새누리당, 경기 의정부시을)

- 이사장으로 있는 박물관 아프리카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노동착취 행위
 -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 채용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와 짐바브웨에서 온 공연단 및 조각가 12명 등 예술단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인 미화 650불과 600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으며, 12명의 노동자에 대한 1억 5천여 만 원의 체불임금이 있으며, 강제노동을 거부하거나 이탈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압수하는 등 「여권법」을 위반한 사항, 아프리카 노동자들에게 곰팡이와 악취가 심하고 벽에 구멍이 뚫리는 등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숙소 제공, 산재보험 미가입, 아프리카 예술단원들에게 하루 식대 2500원을 지급해 오다 면담을 통해 하루 식대 4000원을 지급했고 홍문종 의원 본인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비인간적인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이 자행된 것에 대해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제출됨.
 - 홍문종 의원은 이후 이사장직을 사퇴. 재직 중이었던 단원들과의 합의는 이행됐으나 퇴사한 노동자들과의 합의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¹

1 <http://www.nocutnews.co.kr/news/1210923>, <http://www.polineews.co.kr/news/article.html?no=201494>

3. 심재철(새누리당, 안양시 동안구을)

-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 검색

- 2013년 3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드 사진을 검색,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한 것에 대해 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됨.

- 파행적 국회 위원회 운영

- 2009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의 장소를 임의로 변경해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됨.

4.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만안구)

- 대통령에 대한 욕설 발언

- 2012년 8월 5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년'으로 지칭하여 여성 비하, 욕설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됨.

5.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 동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

- 2009년 3월 1일, 미디어법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을 하던 중, 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서갑원 의원을 밀쳐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제출됨. 이후 고발조치 후 합의 철회

6.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 동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

- 2009년 3월 1일, 미디어법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을 하

던 중, 민주당 의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조원진 의원이 서갑원 의원을 밀쳐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됨. 이후 고발조치 및 1심 벌금형, 이후 합의 철회

7. 장제원(무소속, 부산 사상)

● 동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

- 2008년 12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등 12건을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려는 강기정 의원을 폭행한 것에 대해 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됨.

8. 문학진(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 국회 시설물 파손 행위

- 2008년 12월 18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단독 상정 처리를 위해 사전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을 점거, 집기를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함. 이 와중에 위원장실 문을 망치로 부수었다며 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됨.

9. 이주영(새누리당, 창원시마산합포구)

● 파행적 국회 위원회 운영

- 2010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의 일시 및 장소 등 의사일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됨.

1. 박상도 (새누리당, 대구 중구남구)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검사

- 1991년 5월 분신자살한 김기철의 자살 방조와 유서대필 혐의로 검찰이 강기훈을 기소한 사건으로, 강기훈은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1994년 만기 출소하였으나 2009년 재심을 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선고됨. 직접적인 증거 없이 필적 감정과 정황만으로 기소된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힘.
- 박상도 당시 담당검사에 대해 강기훈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1년 6월 서울지방법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재우기를 담당하셨던 검사 양반,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증언함.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임명 후 반성 혹은 사과 발언 한 적 없음.

-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위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

-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조선일보 편집장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폭로됨.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해 고발당함.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했고 항고까지 기각함.

- 국회의원 출마 위해 공직 임명 8개월 만에 사임

- 민정수석 사임 이후 2015년 3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 공직 임명 8개월 만인 11월에 사임하고 총선 출마함.

2. 김효재 (새누리당, 서울 성북구을)

- 범죄 수사정보 누설해 징역형 선고

-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디도스 사건 관련, 청와대 정부 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수사 정보를 수사 대상자(최구식 의원 등)에게 누설함.(공무상비밀 누설) 2012년 12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되었으나 곧 정부 교체기에 (2013.1.31.) 전격 사면됨.

-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유죄 전력**

-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박희태 대표가 돈봉투를 돌린 사건에 연루,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3.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 새누리당, 비례대표)

-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 참가자 무더기 직위해제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 노조탄압**

-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대전 서구을 후보로 나섰다가 낙마한 뒤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 ‘낙하산 인사’ 라는 비판을 받음.
- 2013년 12월 9일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참여한 노조집행부와 조합원 4356명을 무더기로 직위해제하며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일터로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고 발언. 노조를 상대로 사상 최대 16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대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수서발 KTX 민영화를 밀어붙임.
- 2013.12.26. 코레일 노동조합은 코레일이 각 지역본부장에게 “각 지역본부가 상세한 노조 동향과 조합원 회유 활동 내역을 보고하면 취합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겠다” 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증거로 최연혜 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함.

- **임기 동안 총선 불출마 약속 번복**

- 철도노조 파업이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정치를 하고 싶으니 잘 돌봐 달라”며 자신의 과거 지역구인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인선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짐. 직후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 “취임 때부터 가장 강조한 게 3년 임기를 채우고 싶다는 것이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주어진 임기 3년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총선에는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 했으나 임기를 채우지 않고 불출마 약속 번복함.

4. 김석기 (새누리당, 경북 경주)

- **용산 철거민 모욕하고 사실관계 왜곡 발언**

- 2016.1.8. 경주 외동 농협 북콘서트에서 용산 철거민들이 진압작전 이전에는 화염병을 던지

지 않았음에도 “5층 건물 옥상에서 밑으로 사람과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화염병, 염산병을 무차별로 막 투척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게 지속되는데 경찰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경찰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지요.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입니다.”라며 다섯 명의 시민과 한 명의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폭력진압에 대해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 왜곡.

- 국가인권위도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함.
- 2009년 1월, 서울경찰청장 시절 만든 ‘집회 시위현장 법 집행 매뉴얼’을 무시하고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특공대 강제진압을 최종 승인함. 참사 이후 무전기를 꺼 두었다고 주장했으나, 무전 녹음내용이 공개되자 사퇴함.

● 총선 출마 위해 두 번 공직사퇴

- 2011년 2월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었으나 8개월 만에 그만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함.
-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 임기 10개월을 남겨두고 또 다시 총선 출마 위해 사퇴함.

5. 정종섭(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위배

- 2015년 8월 25일 행정자치부 장관임에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건배를 제안하며 “제가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는 취지로 발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드러내고 위반함.

●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통제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주도

-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주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 이어서 “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 현재 처벌조항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는 것”이라고 발언.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부정하며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조 일부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범죄라 규정해 논란을 일으킴.

6. 추경호(새누리당, 대구 달성군)

●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인수 및 탈출 책임

-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에게 예외승인으로 외환은행을 넘기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 금지”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과거 유권해석이 있음을 알고도 매각을 강행함. 2012.1.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을 탈출할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는 이를 승인함.
-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국무조정실장 재직 시에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 대의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ISDS)을 총괄하면서 론스타의 불법성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논거인 산업자본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중재재판부에 이 사건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민변 통상위원회의 시도도 사실상 봉쇄함. 14년 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탈출, 그리고 탈출 후 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간여함.
- 이미 수조원이 부당하게 론스타에게 유출되었으며, 진행 중인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ISDS)의 결과에 따라 또 다시 국부가 유출될 상황에 처해 있음.

7. 권혁세 (새누리당, 경기 성남분당갑)

● 론스타 산업자본임을 적극 은폐하여 외환은행 불법 인수 및 탈출 책임

-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 재임시절(2007년3월 ~ 2007년12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론스타의 해외 계열사 일제 조사를 지휘 감독함. 2014년 2월 20일에 공개된 제2차 론스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융감독위원회 경유)은 2007년 7월 10일자로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현황」)를 통해 적어도 론스타가 여러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랫동안 모르쇠로 일관함.
- 2011년 12월 26일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는 이미 그 존재를 파악하고 있던 솔라레 호텔 체인과 아수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조사는 생략한 채 골프장(PGM)만을 조사하고는 “PGM을 조사한 결과 비금융주력자 요건에는 해당했으나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거나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금산분리를 위한 국내용이라며 외국계 금융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적극 은폐함. 그 결과 수조원이 부당하게 론스타에게 유출되었으며, 진행 중인 투자자 국가중재 사건(ISDS)의 결과에 따라 또 다시 국부가 유출될 상황에 처해 있음.

8.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 은행법 위반 불구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추진

-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재직. 2003년 7월15일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결정되자, 매각의 적법성을 면밀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2003년 7월 2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이 가진 외환은행 지분 3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론스타 펀드에 매각할 수 있다”고 밝힘. 산업자본에는 은행을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은행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보유한 부처의 장의 직무유기이자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9. 김문수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갑)

● 공권력 남용에 저항하는 시민을 종북으로 매도

-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를 폭력으로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에 항의할 목적으로 종이 태극기를 주워 불태운 시민을 언급하며, “태극기를 태우는 사진 봤나? 반정부 종북 세력이 그만큼 많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발언 (2015년 4월 22일, '세종포럼' 초청강연).
- 서울지법, 국기소각한 시민에 대해 무죄 선고함(2016년 2월 17일).

10. 윤종기(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을)

● 강정마을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책임자

- 육지경찰 총괄 TF팀장으로 2011년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강정마을 일대 집회를 금지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함.
- 중덕 삼거리에 펜스 설치 위해 공권력이 투입되던 2011년 9월 2일, 1,000여명의 공권력 투입해 폭력적으로 농성 주민과 활동가들을 진압함. 당시 위험한 작전을 강행해 부상자 다수 발생함. 현장과 상관없는 구간까지 강정마을과 외부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통제하고 공항리무진버스 노선도 변경하기도 함.
-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요 인사들 추적하여 노상에서 체포하기도 함. 9월 2일, 송영섭 목사, 이강서 신부, 송영홍 신부 등 종교인 포함, 주민과 활동가 35명 연행. 18명 기소됨.
- 더민주당이 윤종기 후보자를 전략공천했지만, 2011년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공권력 투입은 43 사건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중지하고 평화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11. 한상률(무소속, 태안서산)

● 그림로비·고문료 수수 의혹

- 2008년 연말 포항지역 유력인사들과 골프, 식사 등으로 내각 입각 청탁 의혹 받음. 2007년 초 국세청 차장 시절, 전군표 국세청장 부부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시가 5천 여 만원의 ‘학동마을’ 그림 선물로 로비했다는 의혹 제기됨. 2009년 1월 15일, 자진사퇴 후 검찰 조사 피해 해외로 도피함.
- 2011.2.24. 의혹 발생 2년 만에 입국. 2.2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한 전 청장을 피고받인 신분으로 소환. 4.15.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및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전 전군표 청장에게 그림 ‘학동마을’ 을 건넨 것과 퇴임 이후에 국세청 부하직원과 공모해 2009년 5월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주정제조업체 3곳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2014.4.30. 대법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 ‘기획입국설’에 이어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와 짜맞추기 수사라는 평가를 받음.

● 정치적 의도로 표적 세무조사 진행

- 2008년 7월, 노무현 정권 측근기업으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국세청 김동일 계장의 양심선언으로 표적 세무조사였음이 확인됨. 이 과정에서 태광실업 측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상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됨.

12.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 전주을)

●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책임 불인정 등

-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2008년 월간조선 10월호에 “국제적으로는 신뢰도 잃고 망신도 당했는데, 이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 이명박 대통령과 자신이 대국민 사과했던 것에 대해서도 “협상이 크게 잘못됐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게 아니다”며 협상은 국제기준에 맞춰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 대규모 촛불집회와 대통령과 장관의 사과, 그리고 재협상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폄하,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된 협상결과를 인정하지 않음.
- 2011.4.24.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구제역 피해 심각성을 언급하며 “구제역과 조류독감(AI) 피해농민을 위한 모금운동을 제안한다”고 말해 정부의 정책 잘못을 국민의 성금으로 다시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음.

막말 · 의혹 연루 등 기억해야 할 전직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들

1. 권영세 (새누리당, 서울특별시영등포을)

-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
 - 대통령 선거 2개월을 앞두고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 선거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최고대표의원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었으나 허위사실로 드러났음.
 - 관련하여 2013년 7월 24일 박범계 의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2012년 12월 10일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끼워 맞췄다는 내용의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 발언을 녹취한 파일을 공개함.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권 대사는 “대화록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 “MB정부에서 원세훈으로 원장이 바뀐 이후로 기억하는데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다”, “아마 그 내용을 갖고 청와대에 요약보고를 한 건데 그게 어떤 경로로 정문헌(새누리당 의원, NLL 의혹 최초 제기)한테로 갔는데...”, “근데 지금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 아 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며 “만약 이게 문서 뒷받침이 된다면 엄청난 얘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짜깁기와 유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관련하여 검찰은 정문헌 의원을 약식 기소하고 김무성 ·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정원장 등 9명을 무혐의 처분함. 정문헌 의원은 회의록 유출로 유죄판결을 받음.
 - 박범계 의원은 2013년 6월 17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 · 은폐 외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관련 경찰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12월 16일 ‘권영세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과 통화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함. 당시 선거 직전에 이루어진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정치적 개입 여부를 두고 의혹이 제기됨.

2. 이은재 (새누리당, 서울 강남병)

- 용산 참사 관련 막말
 -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도심 테러, 용산 도심 테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범질서를

무시한 그러한 시위대가 화를 자초한 그러한 문제에 의해서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2009-1-21, 행정안전위원회회의) 시위대 저항을 테러로 규정하고 참사를 불러온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는 외면함.

● 연구사업비를 명품 등 구입에 사용

- 한국행정연구원장(2012~2015년)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8일, 정무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기준 의원이 “명품 넥타이, 향수를 연구사업비로 편성된 비용으로 구매하는 등 연구사업비로 축조의금을 집행하고 명절 선물을 구매하고, 근속직원 포상 기념품을 구입하고, 선물비, 홍보기념품비를 집행해서 국무조정실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인정함. 연구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넥타이(3개 78만원)와 ‘아니크 구탈 향수’ (2개 88만원) 구입했고, 법인카드로 해외 출장 때마다 면세점 화장품을 구매하는 등 법인카드를 유용함. 법인카드로 방울토마토, 호박고구마, 총각무, 유기농 오이 등 생필품 128만 원 가량 결제하기도 함.
- 이 전 의원은 “전임 원장이 그렇게 해서 저도 되는 줄 알고,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또 의정활동도 해 보고 그래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 비용으로 전부 다 변제를 했습니다.” 라고 답변

3. 조전혁 (새누리당, 인천 남동구을)

● 법원의 결정 무시하고 전교조 명단 공개

- 2010년 4월 19일, 전교조 명단 공개 말라는 법원 결정 무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등 교사단체에 소속된 교원 명단 22만명(전교조 6만명)의 재직 학교명, 성명, 담당교과 항목 등을 공개함.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로 함부로 공개할 수 없음에도 전교조 등을 공격하기 위해 법원 결정도, 결사의 자유도 무시함.

4. 장제원 (무소속, 부산 사상)

● 용산 참사 관련 막말

- “선량한 시민, 돈 없고 백 없는, 우리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될 서민과 살인도 가능한 새총으로 무장된 폭력을 일삼는 집단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도 무고한 시민이고 살아보겠다는 서민입니까?” (2009년 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강제철거에 저항하는 이들을 무장 폭력집단으로 매도

5. 조배숙 (국민의당, 전라북도익산시을)

● 특정 종교(인)들에 대한 차별 발언

- 2016. 02. 25.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413 후보자 초청 할랄*정책 소견발표회>에서 “할랄단지가 조성되면 무슬림 대거 유입이 불가피하다. 분명하게 반대한다” 고 발언하며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함. (*할랄:이슬람법상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되는 모든 제품)

1. 이한수 (국민의당, 전북 익산시갑)

- 2016. 02. 25.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413 후보자 초청 할랄*정책 소견발표회>에서 “특정 종교의 식품단지로 전락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며 “대통령이 ‘노’ 라고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해야 한다” 고 발언하며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함. (*할랄:이슬람법상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되는 모든 제품)

2. 유종근 (무소속, 전북 전주시갑)

- 2016. 02. 25.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413 후보자 초청 할랄*정책 소견발표회>에서 ‘할랄식품과 동성애 등 차별금지법의 정체성’에 대한 발제에서 “정부는 할랄식품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며, 할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도와 달리, 할랄단지가 조성되면 이슬람 차별금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정부가 할랄단지 조성 백지화를 공표할 때까지 반대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함. (*할랄:이슬람법상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되는 모든 제품)

3. 이강수 (무소속, 전북 정읍시고창군)

- 2010년 고창군수로 있을 당시 고창군의회 의장실에서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 찍자’ 며 성희롱. 당시 이강수 고창군수는 음해라며 피해자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실이라고 인정. 인권위의 성희롱 결정 이후 민주당은 이강수 고창군수를 제명함.

4. 정성근(새누리당, 경기 파주시갑)

- 부동산 투기 및 양도세 탈루 의혹에 대한 위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87년에 분양된 아파트를 88년에 사서 비과세 기간

인 3년 뒤 되팔아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구입자가 88년에 아파트를 샀다고 밝히면서 탈세를 위해 매매 시점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 부동산투기 및 양도세 탈루 의혹에 대한 ‘위증’ 논란이 벌어지자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고 기억으로 의존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고 밝히고 자진 사퇴.

- **유명 인사에 대한 색깔론 제기**

- 2013.11. 자신의 트위터에 “조국·박창신·공지영·김용민… 이 사람들 북한 가서 살 수 있게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 드린다” 며 조롱.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과.

부적절한 언행 · 의혹으로 주목받는 비례대표 후보자들

1. 전희경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새누리당, 비례대표)

-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선동

- “야권은 새로운 국정교과서를 유신 미화·독재 찬양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역사교과서는 패배주의를 일삼고, 북한을 던지시 편들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해 균형 있게 다루지 않았다“ (2015년 10월 13일, MBC 100분토론)
- “최근 올바른(국정)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대한민국 부정 세력은 자신들의 미래 전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과 교과서를 틀어쥐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 희망이 없는 나라, 특권층만 잘사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부모들이 책상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호뭇하게 바라만 봤지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가 아이들의 가치관을 얼마나 흔들었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 (2015년 10월 28일, 새누리포럼 ‘역사 바로세우기, 올바른 역사교과서 왜 필요한가’ 토론회)

2. 김순례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새누리당, 비례대표)

- 시체 장사, 거지 근성 등 세월호 유가족 모욕 글 퍼 나름

- 대한약사회 부회장이던 지난 2015년 4월 28일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부회장 소셜네트워크(SNS) 모임과 세계 약사 연맹 참가자 SNS 모임에 거짓 내용이 포함된 세월호 유가족 비난 글을 퍼 나름. 퍼나른 글은 “도대체 이들(참사 희생자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를 싸우다 희생되었는가“, “의사상자!! 현재 국가 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고 한다. 이러니 ‘시체 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이와 유사한 과거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 이런 터무니없는 유족들의 행위는 한 번도 없었다.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그런 비겁한 ‘거지 근성’은 생각지도 않고 넘어갔다“라는 내용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등이 김순례 부회장 해임 촉구. 이후 김 전 부회장은 대한약사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음.
- 논란이 되자 “깊은 생각 없이 제가 갖고 있는 타이틀을 벗어나 짧은 생각으로 SNS에 글을 올린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절대 본인은 세월호 가족을 유린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절규하는 유가족들에게 우왕청심환을 먹여주던 기억이 가슴에 살아 있다“고 해명함. (2015년 5월 14일, 약사회 초도이사회),
- 비례대표로 선정된 후 “김지하 시인의 세월호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이 카톡에 올라와 있

어 별 생각 없이 이를 제 지인의 그룹카톡에 보냈다. 이 카톡의 내용이 유가족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내용임을 뒤늦게 알고 분향소를 찾아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유가족에게 사과 드렸다” 고 주장 (2016년 3월 23일, 새누리당사 기자회견)

3. 신보라 (전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새누리당, 비례대표)

-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단식을 했던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문재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 주장. 문재인 의원이 여·야가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무시하고, 단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동조단식’ 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시민의 목숨을 더욱 사지로 내모는 행위는 결코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자세라 볼 수 없다.” 발언 (2014년 8월 24일, 광화문 기자회견)

4. 강효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새누리당, 비례대표)

-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 2013년 9월 6일자 1면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다는 단독보도를 배치, 이후 대대적인 ‘혼외자식’ 보도를 주도하며 채동욱 총장 낙마사태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채동욱 검찰총장 낙마 이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됨.
- 정보를 준 이가 광상도 민정수석이라는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거짓말” 이라며 부정. (2014년 1월 조선일보 노동조합 인터뷰)

5. 심기준 (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앞장섬. 2015년 8월 19일 강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되었다” 고 말했으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렇지 않다’ 는 입장을 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지역 여론을 호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발행일 2016. 4. 1

발행처 참여연대

담당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02-723-5300 jjpark@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6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